

세종시 발전방안 (요약)

2010. 1. 11.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추진경위	1
II. 원안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2
1. 세종시 건설계획 및 사업현황	2
2. 문제점	3
III. 세종시 발전방안	5
1. 비전 및 기본원칙	5
2.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조성방안	6
3. 종합 (원안 vs. 발전방안)	13
IV. 기대효과	19
V. 향후계획	21

I 추진경위

①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 국가발전연구포럼('08.12), 지방자치학회('09.6), 선진화재단('09.7) 토론회 등

② 총리 인준을 전후하여 세종시 문제 논의 본격화('09.9)

* "세종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음. 원안 수정 추진해야"(9.3)

③ 합리적인 세종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운영 (1차 '09.11.16, 총 11회 개최)
- 정부지원협의회 운영 (1차 '09.11.6, 총 9회 개최)
- 세종시기획단 출범 ('09.11.5) : 위원회 운영지원 등 (1국 4팀)

④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해 객관적·전문적 연구 추진

- 3개 국책연구기관(국토연구원, KDI, 한국행정연구원) 공동 연구로 발전방안 검토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분석

* '09.11월초~'10.1월말, 연구용역(세종시 특별연구과제) 진행 중

⑤ 대통령과의 대화('09.11.27 방송3사)

- 세종시 원안추진 약속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현행 세종시 건설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방향 등 제시

* 대전·충남 지역인사 오찬간담회('09.12.22)

⑥ 전문가의견, 여론수렴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 발전방안 마련

* 세미나(1회), 공동연찬회(5회), 전문가토론회(4회), 공청회('10.1.19 예정) 등

* 독일 현지시찰('09.12.19~24), 대전·충청지역 방문(3차례) 등

Ⅱ 원안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1 세종시 건설계획 및 사업현황

① 사업개요

- (근거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 지위·구역·명칭 등을 규정한 세종시설치법안 국회 행안위 계류 중
- (위치·면적) 충남 연기·공주, 충북 청원 일원 총 297km² (예정지역 72.91km² + 주변지역 223.77km²)

② 사업계획

- (목표)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5년까지 인구 15만, '20년 30만, '30년 50만 목표)
 - '12~'14년까지 9부2처2청 등 36개 행정기관 단계별 이전
- (총사업비) 22.5조원 : 정부재정(8.5조원) + LH공사(14조원)

③ (추진현황) 총사업비 22.5조원중 5.7조원(25.5%, '09.12 기준) 집행 (그 중 4.9조원을 용지비로 집행)

* 첫마을·시범단지 부지조성 및 광역도로 공사 등에 소요

구 분		합 계	집행액('09.12월)	1단계 ('07~'15)	2·3단계 ('16~'30)
총 계		22.5조원	5.73(25.5%)	17.02	5.48
정 부	소 계	8.5조원	0.83	6.03	2.47
	● 광역교통시설 등	3.15	0.36	1.80	1.35
	● 중앙행정기관	1.60	0.29	1.60	-
	● 학교/시청사 등	3.75	0.18	2.63	1.12
내 공사	소 계	14.0조원	4.90	10.99	3.01
	● 용지보상	5.01	4.29	4.84	0.17
	● 부지조성, 기반시설	8.99	0.61	6.15	2.84

- ◆ 중앙부처 분산이전에 따른 국정비효율 문제 輕視
- ◆ 자족용지 부족, 인센티브 미비 등으로 인구 50만 도시 실현 불가

①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문제점

- 부처 분산 이전에 따른 국회·부처간 협의지연과 소통미흡 등으로 정책품질과 국가경쟁력 저하, 이동·시간비용 초래
 - ☞ 국정비효율 문제로 인해 연간 3~5조원 비용이 발생되며, 향후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 발생 추정 (행정연구원)
- 행정효율화 대책을 마련하여 「이전계획 고시('05, 행안부)」에 반영하였으나, 실효적 대책으로는 역부족
 - 책임총리·총리임기제 등 헌법상 대통령중심제와 상충되거나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대책으로 제시
 - 화상회의 등 IT기술이 가진 의사소통 측면에서의 내재적 한계를 간과하여 시스템 구축 후 無用之物화
 - * 83억원 투입하여 화상회의 시설 구축('03.3)하였으나, '09년말까지 이용실적은 0.8%에 불과 (국무회의 3/379회)
- 행정부 분할사례는 독일이 유일(統獨의 산물)하나, 엄청난 국정비효율로 베를린으로 통합 움직임 강력 대두

* 슈뢰더 前총리 : “행정기능 분산 배치로 엄청난 국가적 비효율 초래”

* 민관합동위원 독일 베를린·본 등 현지방문 (제6차, '09.12.29)

- 대부분 면담자들이 베를린으로 재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증언

- 주요정책기능은 사실상 베를린으로 통합된 상태 (장관등 베를린 상주)

② 기존 계획상 자족기능 크게 미흡

- 원안은 거점 자족기능으로 중앙행정 외에 과학연구·대학·산업·국제교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 이를 실제로 유치하기 위한 자족용지 비율이 6.7%에 불과하여, 실제 인구 50만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
- * 상업·업무용지(2.0%)를 포함한 자족용지 면적은 전체의 6.7%
- * 베드타운인 수도권 신도시보다 자족용지 부족(화성동탄 13.8%)

구 분	자족용지(고용유발)			공공용지			주거용지
	소계	상업업무	거점 자족용지	소계	공원녹지	공공시설	
· 세종시	6.7	2.0	4.7	72.3	52.9	19.4	21.0
· 화성동탄1	13.8	4.1	9.7	56.5	25.2	31.3	29.7
· 충주기업도시	19.8	2.8	17.0	71.1	43.5	27.6	9.1
· 아산테크노	47.7	1.3	46.4	37.4	14.5	22.9	14.9

- 환상형 도시임에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조성함에 따라 효율성 저하 및 도시의 조기 활성화에 한계
 - * 중심순환도로 : 서측(9.7km) '11년, 동측(13.2km) '15년 완공
 - * 외곽순환도로 : 서측(11.7km) '11년, 동측(17.0km) '30년 완공

③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미비

- 토지저가공급·세제 및 재정지원 등 구체적 유치 수단이 거의 없어 자족용지 6.7% 마저도 채우기 어려운 상태
 - 매각대상용지의 평균조성원가(227만원/3.3㎡)가 인근 산단(평균78만원/3.3㎡)에 비해 높아 기업·대학 유치에 한계
- 자족성 연구용역('06) 등에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있었지만, 실제 계획·제도에는 미반영
 - * 이주자에 대한 주택공급지원, 토지가격 인하, 세제 지원, 민자유치 등

Ⅲ 세종시 발전방안

1 비전 및 기본원칙

비전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목표

인구 50만
자족도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도시

중부권
거점도시

5 대
기본
원칙

1.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 제시

- ◆ 중앙행정기관 대신 인구유발·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 자족기능을 유치하고, 과학벨트 거점도시로 육성
- ◆ 대덕·오송·오창 등 주변도시와 연계 발전 추진

2.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시 조기 활성화

- ◆ 도시조성을 2030 → 2020년으로 10년 단축
- ◆ 도시내 주요 인프라도 2030 → 2015년까지 15년 단축

3.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초석 마련

- ◆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기업·대학 등을 중점 유치
- ◆ 수도권외 지역 기업 이전 불허, 기 협의 중인 기능도 제외

4.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 ◆ 이미 확보된 부지·재원 최대한 활용, 매몰비용 최소화
- ◆ 인센티브의 적정성·형평성·공익성 유지

5.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을 담보

- ◆ 금년內 제도 개선 및 각종 계획 변경까지 마무리
- ◆ 새로 제시된 대안사업은 최소한 임기내 착공 원칙

1.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구상

- 도시자족성 확보를 위해 기업·대학 등 입지를 위한 자족용지를 3배 확대하여 약 25만개 일자리 확보
- 자족용지를 6.7%에서 20.7%로 확대 (486만㎡→1,508만㎡)
- * 주거용지 △7.2%p, 공원녹지 △2.5%p, 공공시설용지 △4.3%p

구분	총계 (만㎡)	자족용지(고용유발)			주거 용지	공공용지		
		소계	상업업무	거점 자족용지		소계	공원녹지	공공시설
원안	72km ²	486만㎡	148	338	1,533	5,272	3,859	1,413
(%)	100	6.7%	2.0	4.7	21.0	72.3	52.9	19.4
발전안	72km ²	1,508만㎡	206	1,302	1,008	4,775	3,675	1,100
(%)	100	20.7%	2.8	17.9	13.8	65.5	50.4	15.1

- 목표인구 50만은 유지하되, 이를 위한 일자리 25만개는 예정지역 내에 배치하고(주택 전체 20만호), 예정지역에 40만명(16만호), 주변지역에 10만명(4만호) 분산 수용
- * 인구 10만은 건설청에서 '09.12 수립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상의 “계획관리지역”을 활용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수용

2.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 등 「첨단과학연구거점」 조성

- '15년까지 3.5조원(용지비 제외)을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330만㎡)
- 세종국제과학원을 총괄기구로 하고 기초과학연구원('10착공), 융복합 연구센터('10착공), 중이온가속기('12착공) 및 국제과학대학원('11착공) 등 설치
- KDI, 국토연 등 16개 국책연구기관은 당초 계획대로 이전(10만㎡)
- *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

《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따른 고용효과 》

① 기초과학연구원, 국제과학대학원 등 핵심시설 고용: 3,800명

구 분	기초과학(연) (융복합센터 포함)	가속기	국제과학 대학원	총계
교수/연구원	550	200	400	1,150
Post-Doc.	1,100	-	200	1,200
기술직	250	250	150	650
행정직	400	50	350	800
계	2,300	500	1,000	3,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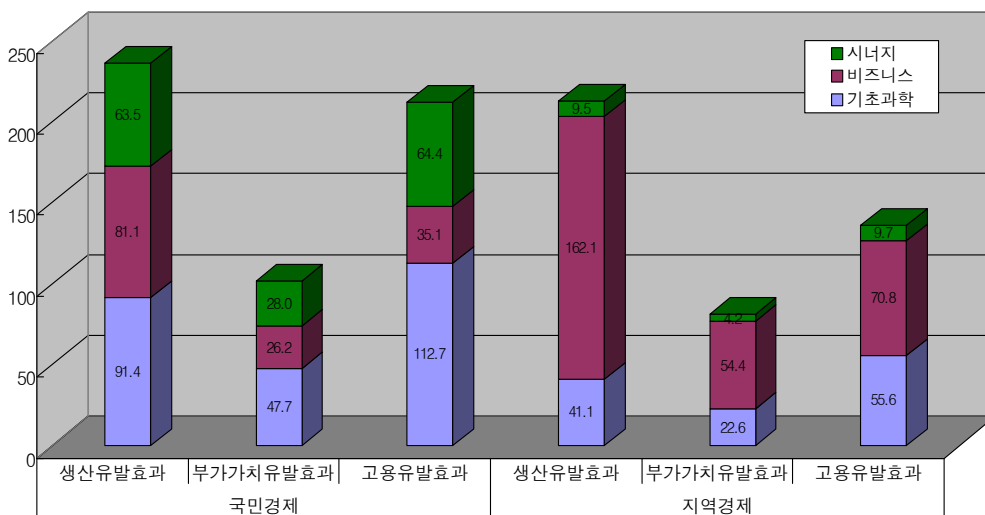
② 세종시내 첨단·녹색산업단지 고용 : 1.6만명('09.9 산업연구원)

-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된 기업·연구소 등이 세종시 첨단·녹색산업단지에 유인됨에 따른 고용효과

③ 고용 파급효과('09.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국민경제 : 20년간('10~'29) 212.2만명(연평균 10.6만명)
* 생산 235.9조, 부가가치 101.8조 발생(연평균 생산 11.8조, 부가가치 5.1조)
- 지역경제 : 20년간('10~'29) 136.1만명(연평균 6.8만명)
* 생산 212.7조, 부가가치 81.2조 발생(연평균 생산 10.6조, 부가가치 4.1조)

(단위: 조원, 만명)



② 일자리 창출·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녹색기업」 육성

- 조기 세종시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新비즈니스모델 기지로 활용

- 맞춤형 토지공급 등을 통해 사업특성에 맞는 투자 유도

※ 투자확정 기업 : 삼성(165만㎡), 한화(60만㎡), 웅진(66만㎡), 롯데(6.6만㎡)

- 녹색산업 원천기술 확보 및 생산기지 육성 등 녹색성장 견인

③ 창조적 인재육성과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우수대학」 유치

- 세종시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초과학·융복합 기술 관련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350만㎡)

※ 유치확정 대학 : 고대(100만㎡), KAIST(100만㎡)

- 충청지역 대학의 공동캠퍼스 설치 또는 산학협력단지 조성 등 지역협력체계 구축

④ 환경과 성장이 조화되는 「녹색도시」 조성

- 중앙공원(280만㎡)을 금강시범지구와 연계하여 문화·휴양·레저 등이 복합된 수변공원으로 조성

- 생활폐기물 관로수송 및 연료화(RDF) 등 최첨단 자원 재활용 시스템 도입 및 자전거도로 확충(400km)

⑤ 교육·과학 특화형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 조성

- 외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투자단지(190만㎡)와 국제기구 등이 입지할 국제교류지구(리틀 제네바, 30만㎡) 조성

※ 투자확정 기업 : SSF(오스트리아, 16.5만㎡, 1.2억불)

3.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① 맞춤형 부지공급

- 투자자가 산업·대학단지 내 자체 부지조성을 원할 경우,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생활필수시설 개발 등 일정수준 허용
- 공급가격은 인근산단 공급가격에서 개발비용을 뺀 수준 고려
 - * 인근 산업단지 평균공급가격 : 78만원/3.3㎡(이중 조성비는 38만원/3.3㎡)
 - 3.3㎡ 당 오송(50만원), 오창(45만원), 아산테크노(72만원), 대덕테크노(98만원), 대덕특구<죽동>(145만원)
- 다만, 원형지 개발자의 의도적 사업지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

② 세제·재정지원방안

- (세제지원) 신설되는 외투기업 및 국내기업 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
 - 소득·법인세 :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 취·등록세, 재산세 : 15년간 감면 가능 (지자체 조례 결정)
- ⇒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
- (재정지원) 既운용 중인 제도를 적용하여 외투기업 등에 고용 보조금 등을 지원하되, 현재 세종시는 세수기반이 없는 점을 감안, 일정기간 동안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로 지원
 - * 세종시 출범 전 : 국고 100% 지원
 - * 세종시 출범 이후 :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국고 70% 지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자체 부담분을 증액

③ 규제완화

-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여 교육·의료부문 정주여건 및 외투기업 경영 환경 개선 등 추진

4.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① 중앙공원(280만㎡)과 연계한 고품격 문화공간 조성

- 문화시설, 호수공원, 중앙공원(국립수목원), 금강시범지구 등을 연계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 및 휴식공간 조성
- 세종시 입주 기업의 상징적 문화시설 투자 유도 및 세계적 예술대학 유치로 문화 활력 제고



②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고교 설립·유치

- 자율형사립고 및 자율형+기숙형 공립고 1~2개소('12)
- 외고('11), 과학고('12), 예술고('13) 등 각 1개교 이상 개교
-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고 1개교 이상 설립('13)

③ 외국인 정주에 불편이 없는 환경 조성

- 영어 통·번역서비스 제공, 외국어 표지판 설치 등
- 다양한 외국인 체류형태를 감안한 주택단지 조성
- 외국인 전문 교육·의료기관 지정 및 각종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홈페이지, Hotline 등 개설

5.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 도시 어디서나 20분내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첨단교통체계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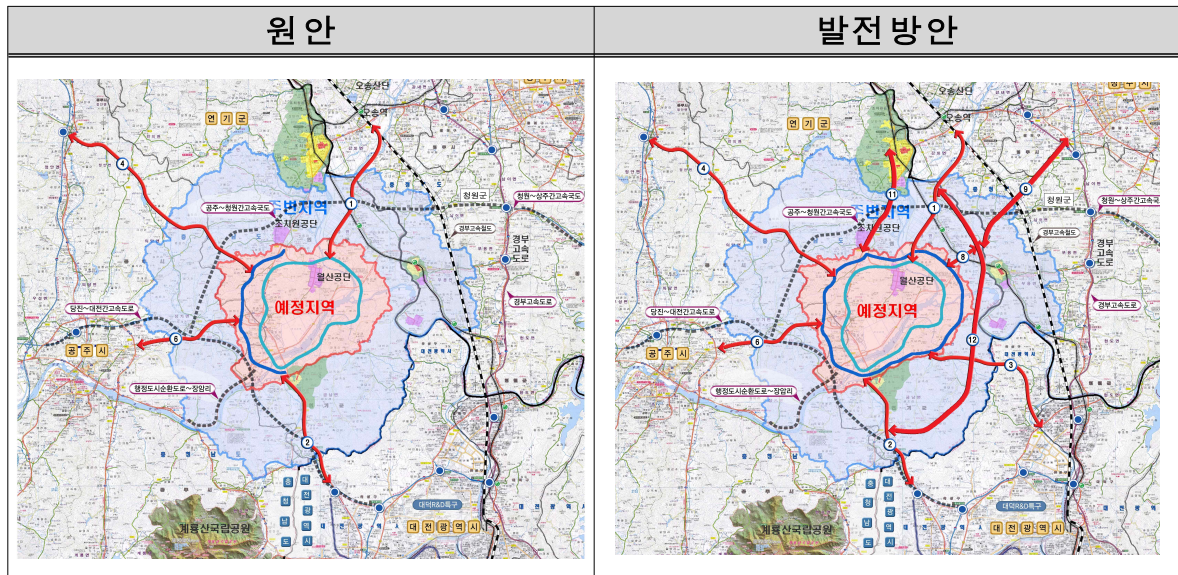
○ (광역교통)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17년 이후 준공예정인 주요 연결도로를 '15년까지 조기 건설

- ▶ 공주시 연결도로 확장 : '17년 → '15년
- ▶ 청원IC 연결도로 확장 : '17년 이후 → '15년
- ▶ 청주시 연결도로 확장 : '17년 이후 → '15년
- ▶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 '17년 이후 → '15년
- ▶ 외곽고속순환도로 신설 : '17년 이후 → '15년

○ (도시교통) '20년 조기 도시건설에 맞추어 중심순환도로 및 외곽순환도로 사업 시기를 앞당겨 시행

* 중심순환도로 : 서측(9.7km) '11년, 동측(13.2km) '15년 → '13년

* 외곽순환도로 : 서측(11.7km) '11년, 동측(17.0km) '30년 → '15년



6. 주민지원 대책 마련

- 영세민용 행복아파트와 경로복지관을 국가재정으로 500세대, 100세대 각각 추가건설하고 입주시기 단축('12말→'11말)
 - * 현재 행복아파트 500세대(지자체), 경로복지관 100세대(LH공사) 건설 중
- 예정지역 이주민·자녀 100% 취업 목표로 직업훈련 실시, 취업알선, 희망근로사업 확대 등을 적극 추진
 - *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최우선 의무고용, 기타 기관은 우선 고용시 급여 보조 등 인센티브 부여
-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주민생계조합*에 지속적인 일감 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 지원
 - * 주민생계조합 : 원주민의 74%인 2,794세대 가입
 - * 일일평균 180명 주민고용, 수익금은 조합원에 배당('09.3, 700%)
- 연기군 잔여지역 공동발전대책, 이주주택지 분양용 자금 융자지원 등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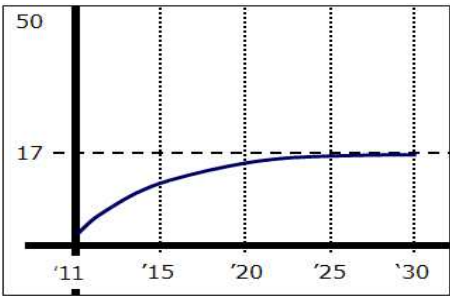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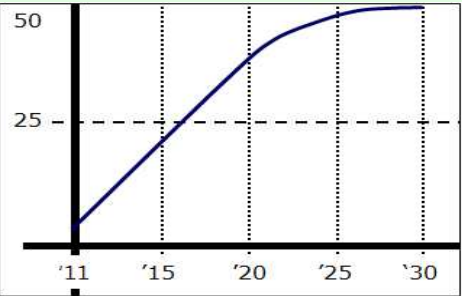
7.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효과 확산

-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충청권내 연계발전체계 구축
 - 세종시의 과학기술·교육연구기능과 권역내 주요 연구·산업집적지 간의 기능분담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 * 대덕(첨단융복합 응용), 오송(BT), 오창(IT·ET)을 기능지구로 지정
 - 전국 주요 도시의 과학분야 핵심연구시설, 생산시설 등의 공동 활용 및 인적교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과학벨트 예산 중 1.7조는 대덕, 오송·오창 뿐 아니라 전국에 R&D비용으로 투자
- 백제~내포~중원문화권 등 충청권 내륙-연안 연계형 역사문화·관광벨트 공동 구축
- 5+2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거점대학 및 혁신·기업도시 등과 연계한 공동발전시스템 구축

3

종합 (원안 vs. 발전방안)

1 원안과 발전방안 종합 비교

분류	항 목	원 안	발전방안
개요	도시성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
	사업기간	'30년까지 단계적 개발	'20년까지 집중개발
	목표인구	50만	50만(예정지역40만+주변지역10만)
토지 이용	주요용도	아파트 위주로 개발	산업·대학·연구기능 대폭 보강
	자족용지 비율	6.7%	20.7%
인구	총고용(일자리)	8.4만명	24.6만명 (원안의 약3배)
	거점고용	2.9만명	8.8만명
	유발고용	5.5만명	15.8만명
	총 인구	17만명	50만명
	인구유입 속 도		
인센티브	부지 저가공급 및 세제·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공급 : 인근산단과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지) 36~40만원/3.3㎡ · (조성지) 50~100만원/3.3㎡ · (연구소) 100~230만원/3.3㎡ ▶ 세제지원 : 기업도시 수준 ▶ 규제완화 : 과학벨트법 근거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 유치면적 (고용인구)	258만㎡(16,770명) * 대학(원)생 3,165명 별도	901만㎡(36,244명) * 대학(원)생 7,100명 별도	
도시 교통	중심순환도로	'11~'15년	'11~'13년까지 2년 단축
	외곽순환도로	'11~'30년	'11~'15년까지 15년 단축
광역 교통	주요광역도로	'11년~'17년 이후(미정)	'11~'15년까지 2년 이상 단축
투자규모	▶ 국고 8.5조원 한도	▶ 국고 8.5조원 한도 + 과학 벨트 3.5조원 ▶ 민간투자 4.5조원	

② 토지이용계획표 비교

대안별 도입기능	원안 (인구 17만)			발전안(인구 50만)		
	자족용지 : 6.7%			자족용지 : 20.7%		
항 목	면적 (만㎡)	비율 (%)	고용(명)	면적 (만㎡)	비율 (%)	고용(명)
총 자족기능	486	6.7	71,100	1,508	20.7	207,500
(거점 자족기능)	338	4.7	28,900	1,302	17.9	87,800
중앙행정기능	41	0.6	10,400	-	-	-
공공업무기능	45	0.6	3,000	45	0.6	3,000
과학·연구(S)	12	0.2	2,300	340	4.7	6,100
대학(E)	160	2.2	3,000	350	4.8	5,000
첨단·녹색 산업(E)	80	1.1	10,200	347	4.8	48,900
글로벌 투자유치(G)	-			190	2.6	19,300
국제교류(G)	-			30	0.4	5,500
(상업업무)	148	2.0	42,200	206	2.8	119,700
기타기능	6,805	93.3	12,600	5,783	79.3	38,200
주거용지	1,533	21.0	8,000	1,008	13.8	23,600
공원·녹지	3,859	52.9	-	3,675	50.4	-
공공시설 (도로, 학교 등)	1,413	19.4	4,600	1,100	15.1	14,600
총 계	7,291	100	83,700	7,291	100	245,700

* 대학(원)생 수(원안: 3,165명, 발전방안: 7,100명)은 고용인구에 미포함

* 중앙행정, 공공업무, 과학·연구기능은 확정된 고용인구를 반영하였고 그 외 기능은 부지 원단위와 인구 등을 감안하여 산정

③ 현재까지 유치가 확정된 자족기능

구 분		총계	'11~'12	'13~'15	'16~'20	
총계	투자액(억 원)	103,674	39,441	50,797	13,436	
	고용인원(명)	36,244	11,255	20,688	4,301	
	대학(원)생(명)	7,100	-	5,600	1,500	
과학 비즈니스 벨트	기초과학 연구원	투자액(억 원)	6,495	4,555	1,940	-
		고용인원(명)	2,300	-	2,300	-
	중이온 가속기	투자액(억 원)	4,600	2,040	2,560	-
		고용인원(명)	500	-	500	-
	국제과학 대학원	투자액(억 원)	2,465	2,465	-	-
		대학(원)생(명)	1,800	-	1,800	-
		교직원(명)	1,000	-	1,000	-
	R&D투자	투자액(억 원)	21,927	5,910	16,017	-
기업	삼성	투자액(억 원)	20,500	7,500	13,000	-
		고용인원(명)	15,800	6,700	9,100	-
	한화	투자액(억 원)	13,270	430	4,170	8,670
		고용인원(명)	3,044	250	1,114	1,680
	웅진	투자액(억 원)	9,000	5,100	3,900	-
		고용인원(명)	2,650	-	2,650	-
	롯데	투자액(억 원)	1,000	400	300	300
		고용인원(명)	1,000	200	300	500
	SSF (오스트리아)	투자액(억 원)	1,380	1,092	288	-
		고용인원(명)	500	400	100	-
대학	고려대	투자액(억 원)	6,012	1,202	1,804	3,006
		대학(원)생(명)	3,600	-	3,000	600
		교직원(명)	2,350	-	600	1,750
	KAIST	투자액(억 원)	7,700	3,710	2,660	1,330
		학생(명)	1,700	-	800	900
교직원(명)	1,300	40	970	290		
기타	16개 연구기관	투자액(억 원)	2,454	2,454	-	-
		고용인원(명)	2,300	2,300	-	-
	정부전산 백업센터	투자액(억 원)	1,972	352	1,620	-
		고용인원(명)	500	-	500	-
	공공업무	투자액(억 원)	4,899	2,231	2,538	130
		고용인원(명)	3,000	1,365	1,554	81

4 인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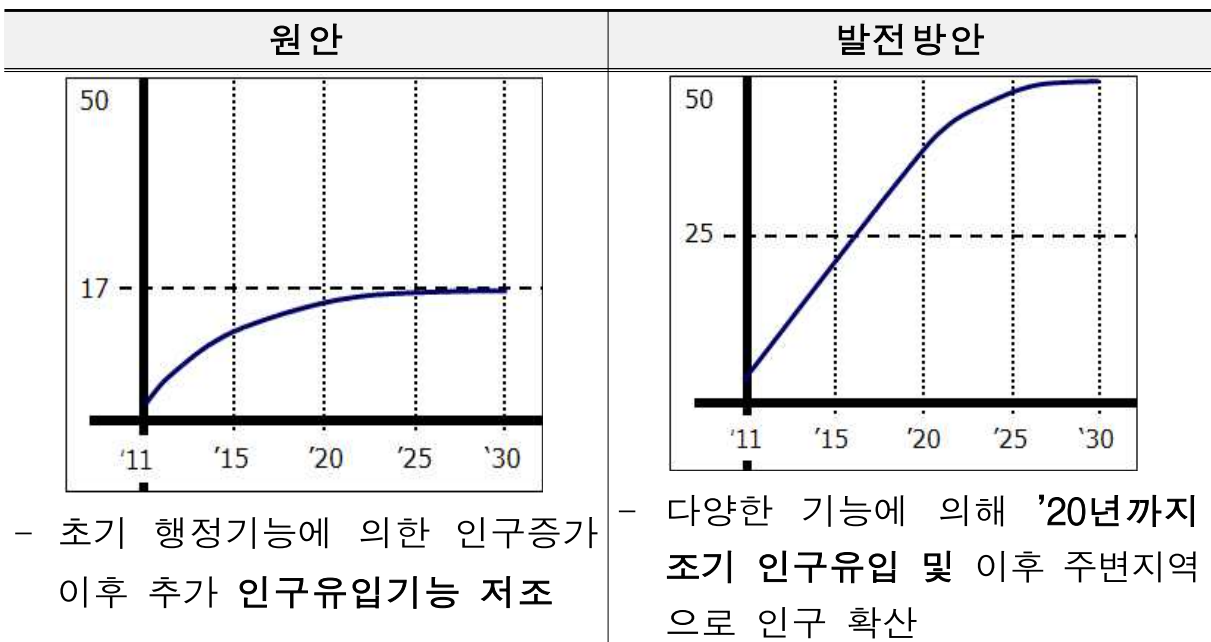
① 고용인구(일자리)

구 분	원 안		발전방안	
	예상고용	확정고용	예상고용	확정고용
거점고용	28,900	16,770	87,800	36,244
중앙행정기능	10,400	10,400	-	-
공공업무기능	3,000	3,000	3,000	3,000
과학·연구	2,300	2,300	6,100	6,100
대학	3,000	1,070	5,000	3,650
첨단·녹색산업	10,200	-	48,900	22,994
글로벌투자유치	-	-	19,300	500
국제교류	-	-	5,500	-
유발고용	54,800	-	157,900	-
상업업무	42,200	-	119,700	-
기반시설(도로, 학교) 등	12,600	-	38,200	-
총 계	83,700	16,770	245,700	36,244

* 원안의 확정고용은 대부분 이전되는 인원인데 비해, 발전방안의 확정고용은 양질의 과학기술인력 위주의 신규로 창출되는 인원임

* 대학(원)생(원안 3,165명, 발전방안 7,100명)은 고용인구에 미포함

② 인구 유입 속도



5 유치시설·기업 등 현황

(단위: m², 명)

구 분	원 안			발전방안		
	대상	면적	고용	대상	면적	고용
총 계		258만	16,770		901만	36,244
중앙 행정	9부2처2청	41만	10,400	-	-	-
공공 업무	시청, 소방서 등	45만	3,000	시청, 소방서 등	45만	3,000
국책 연구	16개 기관	12만	2,300	16개 기관	10만	2,300
과학 벨트	-	-	-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330만	3,800
대 학	고려대	131만	600	고려대	100만	2,350
	KAIST	29만	470	KAIST	100만	1,300
첨단 녹색 산업	-	-	-	삼성	165만	15,800
	-	-	-	한화	60만	3,044
	-	-	-	웅진	66만	2,650
	-	-	-	롯데	6.6만	1,000
글로벌 투자	-	-	-	SSF	16.5만	500
국제 교류	-	-	-	-	-	-
기타	-	-	-	정부전산 백업센터	1.7만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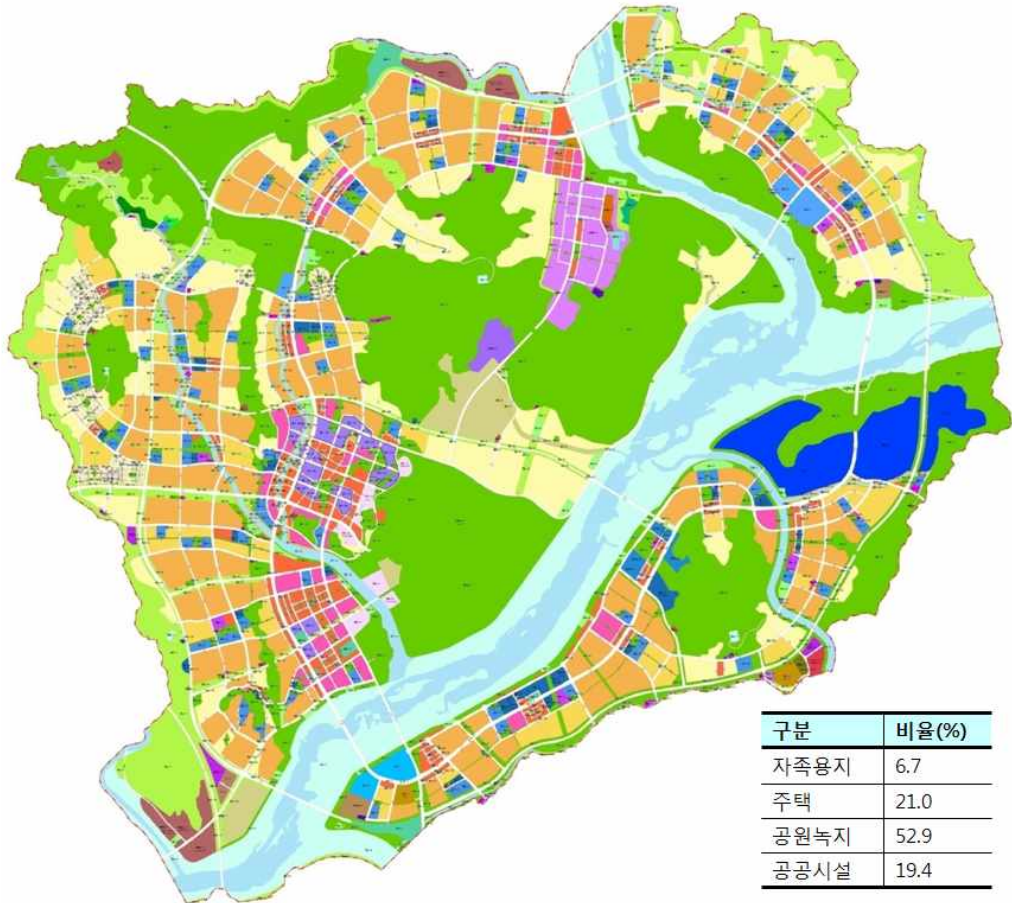
6 투자규모

구 분	계	재 정		민 간 (현재까지)
		세종시 건설	과학벨트 조성	
원안	8.5조원	8.5조원	-	-
발전방안	16.5조원	8.5조원	3.5조원	4.5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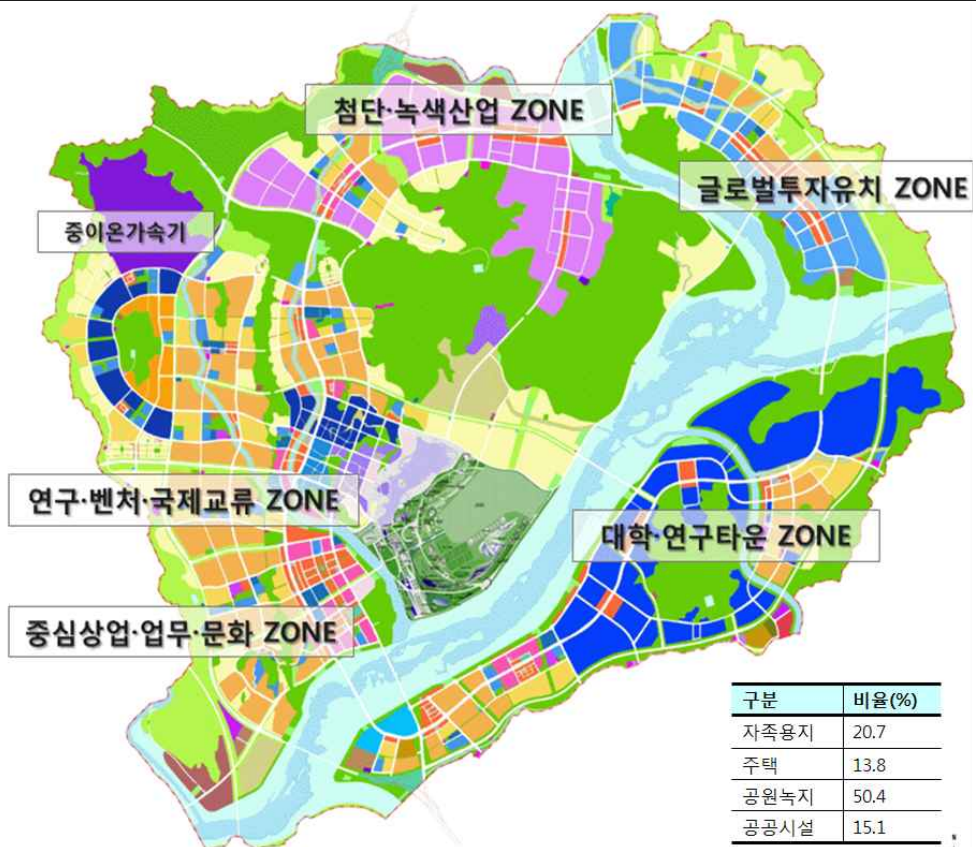
* 대학부문 투자는 제외

7 토지이용계획도 비교

원안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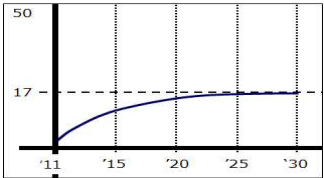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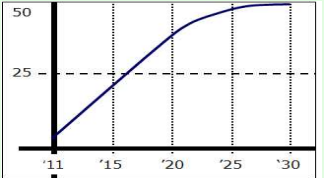


IV 기대효과

1 고용 및 인구유발 효과

- (인구유발효과) 자족용지 비율 증가(6.7% → 20.7%) 및 유수의 대학·기업 유치 등으로 고용·인구가 크게 증가
 - 현재까지 확정된 고용인구가 원안에 비해 2~3배 증가
 - 특히, 원안은 대부분 이미 고용된 인구가 타지역에서 이전하는데 반해, 발전방안은 대부분의 고용이 신규로 창출
- * 총 고용인구는 8.4만명 vs 24.6만명, 총 인구는 17만명 vs 50만명으로 발전방안이 원안보다 약 3배 수준
- (인구유입속도) 발전방안은 거점 자족기능의 초기 집중 유치로 인구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증가
 - * 20년에는 목표인구에 근접

(만명)

항 목	원 안	발전방안
총고용(일자리)	8.4	24.6(원안의 약3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고용 	2.9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확정된 고용인구 - 대학(원)생 	1.7 0.3	3.6 0.7
○ 유발고용	5.5	15.8
총 인구	17	50
인구유입 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행정기능에 의한 인구증가 이후 추가 인구유입기능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기능에 의해 '20년까지 조기 인구유입 및 이후 주변지역으로 인구 확산

② 경제적 편익 (KDI, 행정연구원)

- 원안은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로 마이너스 편익 발생
- 발전방안은 행정비효율을 예방하는 한편, 연구·교육기능 유치 등에 따른 편익이 평균 10배에 이름

③ 지역발전효과 (국토연구원)

- 생산,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충청권에 대한 지역발전 효과도 발전방안이 원안에 비해 약 3배에 달함

항 목				원안 검토안 (A)	발전방안 (B)	B/A
경제적 편익 (KDI)	중앙행정 부처이전	행정 비효율성 (- 편익)	협의	-0.13조원/년	없음	-
			광의	-4.68조원/년		
		이전부지 활용 편익	총 0.77조원			
	과학연구 기업유치	R&D투자편익+ 기업 부가가치 순증		0.091 ~ 0.45 조원/년	0.80 ~ 4.64 조원/년	평균 10배
교육기능		0.5조	2.1조	4.2배		
지역 발전 효과 (국토연)	생산활동 파급효과 (충청권)	생산(조원)	10.2	30.9	3.03배	
		부가가치(조원)	5.0	14.4	2.88배	
		고용(만명)	9.8	27.7	2.83배	

⇒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발전방안의 기대효과가 훨씬 큼

V 향후 계획

① 발전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조치

- 행정도시특별법 개정
 - 발전방안 발표 후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절차 진행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
 - 과학벨트특별법(국회 상임위 계류중) 제정 후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② 추가 투자 유치

- 유치 대학·기업 등과 MOU 체결 등 추가 조치
- 글로벌 기업·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IR 추진
-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운영, 세종시 성격과 부합하는 교육·산업기능 유치

③ 발전방안 실행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

- 토지공급지침 등 관련지침 개정
- 법 개정 후 5개월 내 기본·개발계획 변경 완료

< 조감도 >

원안



발전방안

